
제14차 국제재정포럼

[The 14th Korea-OECD International Forum on
Budgeting]

출장 보고서

2026. 10. 20.

1. 출장 개요

□ 일시: ' 26.9.28(월)~10.3(토), 4박 6일(출·입국일 포함)

- 김세직 원장: ' 26.9.29(화)~10.2(금), 2박 4일

- 이태석: ' 26.9.28(월)~10.1(목), 3박 4일

* 국제재정포럼 이후 조세지출 분류체계 조사 출장 진행

- 노 단: ' 26.9.28(월)~10.3(토), 4박 6일

- 유하나: ' 26.9.29(화)~10.3(토), 3박 5일

- 윤혜정: ' 26.9.29(화)~10.3(토), 3박 5일

□ 장소: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출장자: 김세직 원장, 이태석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유하나 재정·사회정책 연구부 전문연구원, 노단 성과확산팀 연구원, 윤혜정 통역사

2. 출장 목적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 제14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 '에 참석 및 행사 개최 진행 지원

* 상기 행사는 기획예산처가 주최하고, KDI와 OECD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포럼으로 KDI는 동 행사 개최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처로부터 위탁받았음.

3. 출장 일정

□ 9.28(월) - 노단

- 11:20 인천 출발 → 18:30 파리 도착 (사전 답사 및 현지 준비)

* 이태석: 개인 일정으로 9.25(금) 파리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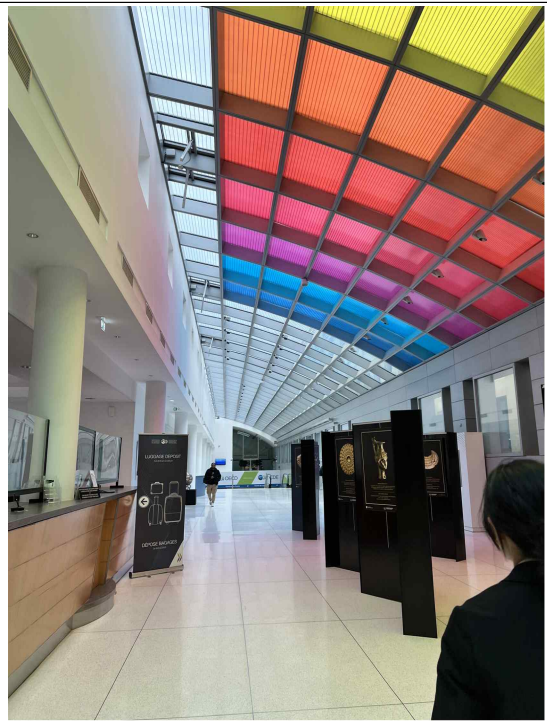
□ 9.29(화) - 이태석, 노단

- 11:00~12:00 행사장 사전 점검 및 동선 확인

- 13:00~14:00 OECD 실무진 행사 운영 관련 업무 협의 회의



OECD 출입구



OECD 컨퍼런스센터 전경



CC2 내려가는 길



행사장 전경(CC2)

- 9.29(화) - 김세직, 유하나, 윤혜정
 - 11:20 인천 출발 → 18:30 파리 도착
- 9.30(수) - 김세직, 이태석, 유하나, 노단, 윤혜정
 - 행사 1일차 참석 및 개최 지원

09:00~09:30('30)	개회식
좌 장	Barry Anderson OECD 예산최고책임자회의(SBO) 명예의장
개 회 사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환 영 사	김세직 KDI 원장
	Yasushi Masaki OECD 사무차장
축 사	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09:30~10:00('30)	단체촬영 및 커피브레이크
10:00~12:00('120)	[세션1]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 (Budgeting for Growth and Transformation)
발 제	Thomas Larouche 캐나다 예산·정부운영총국장 Damian Mullaly 호주 재무부 선임대표,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 Ben Gaukrodger 뉴질랜드 재무부,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Douglas Sutherland OECD 경제국 과장
종합토론	종합토론
12:00~14:00('120)	오 찬
14:00~15:30('90)	[세션2]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운용 (Budgeting in Times of Crisis)
발 제	Pavlina Karasiotou 그리스 재무부 재정정책총국장 Sami Yläoutinen 핀란드 감사원장, 前 예산총국장 Mário Monteiro 포르투갈 前 예산총국장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종합토론	종합토론
15:30~16:00('30)	커피브레이크
16:00~17:30('90)	[세션3] 미래 재정 과제 극복 (Overcoming Fiscal Challenges)

발 제	오현경 기획예산처 재정지속성과장 Stephane Jacobzon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 Camila Vammall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선임정책분석가 Daniel Gerson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 Claire Salama OECD 공공거버넌스국 정책분석가
종합토론	종합토론

- 10.1(목) - 김세직, 이태석, 유하나, 노단, 윤혜정
- 행사 2일차 참석 및 개최 지원

09:30~11:30('120)	종합토론
종합토론	(좌장) Barry Anderson OECD 예산최고책임자회의(SBO) 명예의장 Thomas Larouche 캐나다 예산·정부운영총국장 Damian Mullaly 호주 재무부 선임대표,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 Ben Gaukrodger 뉴질랜드 재무부,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Sami Yläoutinen 핀란드 감사원장, 前 예산총국장 Mário Monteiro 포르투갈 前 예산총국장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11:30~12:00('30)	폐회식
폐회사	김세직 KDI 원장 Jon Blondal OECD 공공관리예산부장

- 귀국: 20:35 파리 출발(김세직) → 10.2(금) 15:50 인천 도착

□ 10.2(금) - 유하나, 노단, 윤혜정

- 귀국: 20:35 파리 출발(유하나, 노단, 윤혜정) → 10.3(토) 15:50 인천 도착
* 이코노미 좌석 항공권 소진으로 김세직 원장과 별도 귀국
** 이태석: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본 과제 출장 일정 진행 후 귀국

4. 주요 논의 내용

세션1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

[세션 요약]

- ☐ 각국과 OECD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구조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공공지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 캐나다는 자본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체계를, 호주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면서 AI·고령화·에너지전환 등에 대응하는 장기 재정전략을, 뉴질랜드는 재정여력과 공공부문 효율화를, 스웨덴은 재정준칙과 재정 신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OECD는 단순한 지출 확대보다 R&D·인적자본·인프라 투자와 규제·인허가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한국은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호주 발표에서 주요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으며, OECD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부채와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단기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비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토론에서는 한국의 재정대응 및 미래기금(Future Fund) 구상이 소개되었으며, 미래산업·AI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향후 재정여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논의됐다.

발표 1. Thomas LAROCHE 캐나다 예산·정부운영총국장

- ☐ Thomas LAROCHE 캐나다 예산·정부운영총국장은 인구 증가 둔화와 생산성 정체로 향후 경제성장이 자본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2025년부터 새로운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발표 2. Damian MULLALY 호주 재무부, 주OECD호주대표부 경제참사관

- ☐ Damian MULLALY 호주 재무부, 주OECD호주대표부 경제참사관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구조 전환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 생산성 향상과 자본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생산성·고용참여율이 높아지면 세입 기반이 강화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특히, 2026년 세대간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바탕으로 AI, 지능형 분절, 에너지 전환, 인구고령화, 산업 전환을 향후 호주 경제를 변화시킬 5대 구조적 전환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노동공급·연금·보건·돌봄 지출에 대한 조정 압력이 호주보다 이른 시기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비교하였다.

발표 3. Ben GAUKRODGER 뉴질랜드 재무부,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 Ben GAUKRODGER 뉴질랜드 재무부,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은 법률로 특정한 고정 숫자의 재정준칙을 강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부채, 장기적인 세입·지출 균형, 재정위험 관리,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재정체계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
- 구조적 적자를 줄이고 재정여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현재의 지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지정학적 충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발표 4. Douglas SUTHERLAND OECD 경제국 과장

- Douglas Sutherland OECD 경제국 과장은 공공지출이 장기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OECD 경제검토 및 정책권고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 현재는 많은 국가가 높은 공공부채와 국방·기후·에너지·공급망·고령화 등의 지출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어떤 지출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한국의 낮은 현재 부채수준과 반도체 관련 세입 증가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단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빠른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압력에 대비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토론. Erik HÖGLIN 스웨덴 재무부 및 OECD 주재 스웨덴 상임대표부 경제참사관

- Erik HÖGLIN 스웨덴 재무부 및 OECD 주재 스웨덴 상임대표부 경제참사관은 1990년대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구축한 재정준칙과 정치적 합의가 장기적인 성장환경을 만드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론. 한국측 발언

- 토론에서 한국은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세입을 활용해 미래산업·미래세대·AI 경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기금(Future Fund)’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대상과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의 재원을 미래 투자에 배정하려 한다고 소개하였다.

세션2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운용」

[세션 요약]

- 각국은 그리스·핀란드·포르투갈의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에너지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재정·예산체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위기 이후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다.
 - 공통적으로 위기 대응에는 신속한 재정지원과 예산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정준칙의 예외 범위와 지원대상, 지원기간, 종료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위기 이후 기존 재정목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그리스와 포르투갈 사례에서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관리체계 자체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한국과 핀란드 사례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지원의 선별성과 재정지원의 종료조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 한국의 경우,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 대응의 신속성, 지원대상의 선별, 정책효과 및 종료조건을 설명했다.
 - 유류가격 상한, 가계·에너지 지원, 기업·수출·물류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예산 집행실적과 실제 정책효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유류가격 상한제는 당초 한시적 조치로 설계됐으나 국제유가 변동과 겨울철 에너지 부담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 토론에서는 캐나다가 유류세 감면의 종료시점 또는 시장가격과 연계된 종료방식을, 뉴질랜드가 연료가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자동 종료조건을 언급하면서 위기대응 정책의 종료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계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표 1. Pavlina KARASIOTOU 그리스 재무부 재정정책총국장

- Pavlina KARASIOTOU 그리스 재무부 재정정책총국장은 2008년 이후의 심각한 경제·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 경험을 소개했다.
- 중기재정전략, 지출상한, 지출검토, 성과예산·녹색예산, 회계개혁 및 독립적 재정기관 등을 도입했으며, 위기 이후에는 외부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2. Sami YLAOUTINEN 핀란드 감사원장, 前 예산총국장

- Sami YLAOUTINEN 핀란드 감사원장, 前 예산총국장은 코로나19 당시 기존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지출상한을 크게 완화하면서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지출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위기 상황에서도 예외 적용 범위와 종료조건을 명확히 하고, 위기 이후 기존 재정준칙으로 복귀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과 독립적 재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3. Mário MONTEIRO 포르투갈 前 예산총국장

- Mário MONTEIRO 포르투갈 前 예산총국장은 2010년대 재정위기, 코로나19, 에너지위기를 비교하며 위기의 성격에 따라 재정대응 방식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 재정위기 이후 중기재정체계, 다년도 지출한도, 프로그램예산, 독립적 재정위원회, 재정·회계 관리체계 등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와 에너지위기에서는 기존 재정여력과 예산상 유연성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하

면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표 4.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중동 위기에 대한 재정 대응: 한국의 사례

-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사례로 위기 대응의 신속성·선별성·정책효과 및 종료조건을 분석했다.
-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공급망·에너지·산업 전환 관련 대책을 포함했으며, 예산 집행률과 실제 경제적 효과를 구분하고 지원대상, 종료기준, 재정비용 및 정책성과를 사전에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션3 「미래 재정 과제 극복」

[세션 요약]

- 한국과 OECD는 저성장·고령화·기술변화·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재정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전략과 정부혁신의 방향을 논의했다.
- 한국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AI·반도체·미래기술, 청년·지역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입의 미래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규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OECD는 재정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보건·사회보장 등 구조적 지출의 개혁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에서는 이러한 재정·정부개혁이 기술적 제도 설계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민의 이해와 신뢰, 의회 및 부처 간 협력 등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개혁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이 논의됐다.

발표 1. 오현경 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장

- 오현경 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장은 AI 전환, 초저출산·고령화, 지역인구 감소, 지정학적 경쟁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을 지원하는 재정투자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 2027년 예산에서는 AI·반도체 및 7대 전략기술, 청년, 지역·취약계층, 안보 등에 재원을 집중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폐지 등을 통해 재정규율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초과세입을 미래기금에 적립해 생산적 투자, 차입 축소 및 향후 정책을 위한 예비재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2045년을 목표로 성장·공동체·공공재정 및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국가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2. Stephane JACOBZON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

- Stephane JACOBZON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장기간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공공부채가 증가한 가운데, 고령화·보건·국방·금리 상승 등으로 재정여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연금지출은 재정개혁의 핵심 분야로, 법정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기퇴직 제한, 보험료율 조정,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기대수명 등에 연계한 자동조정장치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지출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 지출검토, 공공조달·인력·부동산 관리 개선과 함께 재정개혁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3. Camila VAMMALL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선임정책분석가

- Camila VAMMALL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선임정책분석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주요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제시했다.
- 고령자·구직자·질병·장애인·부모·청년 등 대상별로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근로유인·보육·재활 등을 결합해 취업과 노동시장 잔류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약품 가격 및 구매체계 개선, 병원 중심에서 일차·재택의료로의 전환, 의료기관의 지불방식과 지출상한 개선, 공공·민간 의료비 부담구조 조정 등을 통해 지출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4. Daniel GERSON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

- Daniel GERSON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낮은 신뢰와 복잡한 행정체계, 축소되는 재정여력, 반복되는 위기 대응으로 인해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에 시민이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며,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기 전에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프랑스의 사회 여론 분석, 브라질의 시민참여형 정부계획, 오스트리아의 자동 가족수당, 한국의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 모델 등을 이러한 정부혁신 사례로 소개했다.

발표 5. Claire SALAMA OECD 공공거버넌스국 정책분석가

- Claire SALAMA OECD 공공거버넌스국 정책분석가는 정부의 규제·행정 절차가 개별적으로는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됐더라도 장기간 누적되면서 행정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시키고 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규제 부담 완화,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행정부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축소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검토, 중기지출계획의 구속력 강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준칙,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공공투자 보호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재정개혁은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정치적 문제이므로, 재정상황과 정책적 선택의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 Juan Manuel SANTA CRUZ CAMPAÑA 주 OECD 칠레 대사

- Juan Manuel SANTA CRUZ CAMPAÑA 주 OECD 칠레 대사는 재정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적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정당국이 전문적인 수치와 규칙만 제시하는 데서 벗어나 복잡한 재정문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하고, 부처·의회와 조기에 협력해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며, 정부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